# 헝가리, 결혼하면 4천만 원 대출 혼인 건수 급증

헝가리에서 신혼부부에게 거액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도입한 이래 결혼 건수가 기록적으로 증가해 정부가 반색하고 있다.

2일 '연합뉴스' 가 영국 일간 더타임스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헝가리 정부는 수년 전 여성이 41세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1,000만 포린트(약 4천만 원)을 빌려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현지에선 일반 직장인의 2년 치 연봉에 해당하는 거액이다. 여기에 5년 이내에 한 명의 아이를 낳는 부부에겐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고, 3명의 아이를 갖게 되면 대출금을 전액 탕감해주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는 장기간 정체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인구 1천만 명의 헝가리는 수년 전부터 인구가 연간 4만 명씩 줄어드는 '인구 절벽' 에 부딪혀 국가적인 위기감이 감돌던 상황이었다. 현재 헝가리 여성들이 평생 낳는 자녀 수는 1.45명으로 EU 평균 1.58명을 밑돌고 있다.

정책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헝가리에선 돌연 '결혼 붐' 이 일었다.

헝가리 통계청은 최근 결혼 건수가 30년 전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진 이래 가장 높다고 밝혔다. 올 9월만 놓고 보면 월간 기준으로 1979년 이래 4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한다. 외국인들이 결혼식장 대여 등의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헝가리로 몰리고 있는 것도 결혼 붐이 조성된 하나의 이유로 꼽힌다.

덩달아 결혼 산업도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

다만 헝가리 정부가 도입한 정책이 '이성' 신혼부부에게만 한정돼 동성 커플들 사이에선 불공평하다는 불만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극우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2010년 집권 이래 이민자와 동성애자 등을 겨냥한 혐오 메시지를 자주 전파해온 인물이다. 최근에는 '성 소수자' (LGBTQ,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등) 가수의 참가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이유로 유럽 최대 음악 축제인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내년도 대회를 보이콧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 일본, '군함도 보고서'에 '강제노역' 또 빠뜨려

일본이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메이지시대 산업 유산의 두 번째 후속 조치 이행경과보고서에도 한국인에 대한 강제노역 인정이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 사항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민일보' 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는 이날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본의 근대 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경과보고서' 는 일본이 2017년 처음으로 제출했던 보고서에서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일본은 2015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군함도를 비롯한 강제노역 시설 7곳을 포함한 메이지 시대 산업시설 23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

일본은 당시 등재 과정에서 일부 시설에서 한국인과 기타 국민이 자기 의사에 반하게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했다고 인정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은 2017년 12월 제출한 첫 번째 이행경과보고서에서 강제(forced)라는 단어를 명시하지 않고 "제2차 세계대전 때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전쟁 전(前)과 전쟁 중, 전쟁 후에 일본의 산업을 지원(support)한 많은 수의 한반도 출신자가 있었다." 고 표현해 문제로 지적됐다.

정보센터도 해당 유산이 있는 나가사키현이 아니라 도쿄에 만들겠다고 해 논란이 있었다.

이에 한국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논평에서 "일본 측이 한국인의 강제 노역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보고서 역시 일본 정부가 상기 관련 이행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고 밝혔다.

또 "세계유산위원회가 '당사국간 대화' 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주요 당사국인 우리 측의 지속적인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동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한 데 대해서도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 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열린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측에 '당사국간 지속적 대화' 를 독려하는 등의 결정문을 채택했다.

# 브라질, 마리화나 원료 치료제 생산·판매 허용

브라질 보건위생 당국이 마리화나(대마초)를 원료로 하는 치료제의 생산·판매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브라질에서 의학적 치료와 과학적 연구 목적의 마리화나 재배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연합뉴스' 에 따르면 브라질 보건부 산하 국가위생감시국은 전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의사의 처방을 받은 경우에만 마리화나를 이용해 만든 치료제를 일반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1인당 치료제 구매량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허용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가위생감시국은 개인이 임의로 마리화나를 이용해 약품을 제조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가위생감시국은 지난 6월 치료·연구 목적의 마리화나 재배와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제의를 승인했다. 당시 마리화나 재배·사용을 위한 기술적·행정적 문제도 검토됐다.

브라질의 유명 민간 의료기관인 오스바우두 크루스 재단은 지난해부터 난치성 간질 치료법 개발을 위한 마리화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여론조사에서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찬성 의견이 빠르게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찬성 의견은 1995년 17%, 2012년 20%, 2017년 32%로 늘었다. 반대 의견은 1995년 81%, 2012년 77%, 2017년 66%였다.

브라질은 남미지역 최대 마리화나 유통 국가이다. 브라질 당국은 인접국 파라과이에서 생산되는 마리화나의 80% 이상이 브라질에 유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파라과이는 멕시코에 이어 세계 2위 마리화나 생산 국가다.

www.isemusa.com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방문상담 가능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5730 Beach Blvd. Ste. 202 ~ 203, Buena Park, CA 90621
*Garden Grove에서 Buena Park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